“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 절실….전남 ‘청춘창고’ 관심 필요”

민선 7기 시도지사 일자리 창출 간담회 무슨 얘기 오갔나

이용섭시장, 현대 완성차 공장 유치 재원·노조 등 협조 절실
김영록지사, 일자리 플랫폼 구축… 1000개 에너지기업 유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전남 일자리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재원, 법무, 기술, 노조 등에 대한 지원 절실”=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주요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주요 참모진,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간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합의를 반영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라며 “광주시는 이 방식을 적용한 현대차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을 빛그린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성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사례를 다른 산업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해외투자의 국내투자로의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특혜성 논란, 노동계의 노사민정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대한 어려움, 새로운 투자 모델로 법규상 제약, 예산·법무·기술·노조 분야 등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역일자리 지원T/F’를 구성해 재원과 법무, 기술, 노조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형 일자리 ‘청년 마을로, 청춘 창고’ 등에 관심 필요”=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남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일자리 플랫폼은 고용 예측, 일자리 사업 기획·집행, 취업·창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체계다. 청년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전남형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마을로’ 사업과 순천 ‘청춘 창고’를 제시했다. ‘청년 마을로’는 청년 활동가가 사회적 기업 등 마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온라인 마케팅 등을 주도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춘 창고’는 낡은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점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대표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대규모 창업 벤처타운을 조성해 창업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2000개, 자립형 마을공동체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 팜·양식·축산 등 농수축산업 혁신밸리 조성해 청년 창업농을 대거 육성하고,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1000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연계한 한전공대 유치도 역설했다.

2차 전지·마그네슘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해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고, 남해안 관광 휴양 벨트 구축 등을 통해 관광객 6000만명 시대를 열어 관광서비스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제12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감사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맡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여론 질타 부처 수장 바꿔 文정부 2기 국정 동력 확보

중폭 개각 배경과 의미

국방장관 교체 군 개혁 확인
교육부·고용부 문책성 인사

30일 단행된 중폭 개각에 함축된 핵심 키워드는 ‘심기일전’으로 집약된다.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정책적 비판의 대상이 된 부처 수장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 개혁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하자는 의미와, 문재인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뭉개기’ 논란을 촉발한데다 각종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교육부·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여론의 비판에 처했던 만큼 ‘문책성’ 교체가 단행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발탁된 것은 국회 교문위 간사직을 수행하는 등 교육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정책을 잘 관리해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장관에 기용된 이재갑 전 차관은 이 부처의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부 행정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졌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성윤모 특허청장은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는 최근 성(性)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는데 지난 26일 통계청장 등 6명의 차관급 인선을 한 바 있어 교체 폭도 애초 예상보다 커졌다. 우선 방위사업청장으로 감사원 출신의 왕정홍 후보자를 내정한데서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석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인선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한 잣대로 작동했다는 평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후보자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양향자 후보자는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를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美 25% 고율관세 부과땐 기아차 수출 접어야 할 판

백척간두에 선 호남경제

④ 자동차산업 위기

광주공장 지난해 18만대 수출
지역경제 심각한 타격 예상
군산도 한국GM 폐쇄 먹구름

국내 자동차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수입차 공세에 밀리며 국내 생산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통상압력’에 내몰리면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할 경우 지역경제에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최대 현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여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이후 최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의견을 조사하는 등 ‘관세 폭탄’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전량 생산하는 쏘울과 스포티지를 미국에 수출해오고 있는 만큼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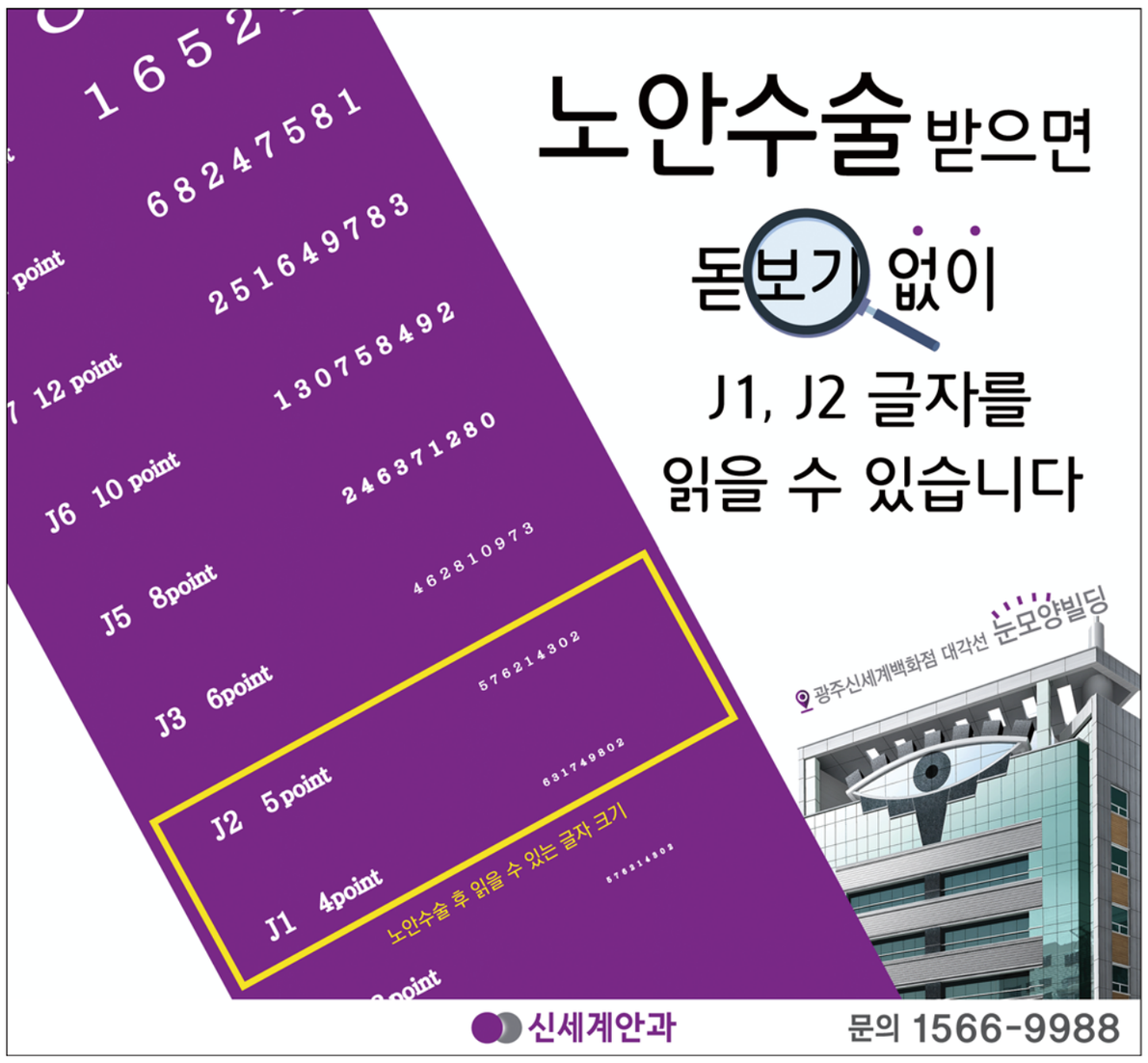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만 전체 생산량(49만2233대)의 37.3%인 18만3959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쏘울은 10만9625대, 스포티지는 7만4334대에 달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만 59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내 제작 뒤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전체 국내 생산 물량의 37.3%에 이른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26만4037대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46.7%인 12만3202대에 달했다. 한국GM도 25.2%에 이르는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광주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14조1760억원(2016년 기준)으로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44.6%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액도 광주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10조)의 42.4%(4조2220억원)에 달한다.

군산도 비슷하다. 공장에만 5000여명, 부품·협력업체 135곳에 1만3000여명이 근무해 지역 고용 비중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걷힐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현대차 전주공장도 중형트럭 생산 라인의 판매 악화로 지난 3월 가동을 일부 멈춘 바 있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지난해 상반기(25만3440대)에 견줘 올 상반기 생산량을 10.6%나 줄었다.

지역 경제계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최근 8년래 가장 적은 수준까지 추락하는 등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매출 감소 뿐 아니라 지역 고용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현실을 감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끝〉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